

원유가 인하론과 관련한 반론

이 광 용 /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상임대표

금년 5월 2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축산인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낙농인은 원유수급의 불안정으로 젖소도태의 고민과 함께 계속되는 원유값 인하 주장에 정신적 불안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때, (사)낙농진흥회가 단체와 낙농인을 비방, 모독하는 일방적 기자회견회를 한데 대하여 사태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반론을 제기합니다.

1. 원유수급 불안정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특정 단체가 책임론을 주장하며 낙농기를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각종 선전과 선동을 일삼는 행태는 집유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회원 단체의 책임도 주장 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첫번째, (사)낙농진흥회의 기자회견이 낙농발전의 주무단체로서 혼란기에 필요했는지의 문제입니다.

2002년 5월 8일 (사)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칭한다) 회장명의로 기자회견의 시기는 젖소도태와 더불어 원유가격 인하설로 모든 낙농인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터에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능가는 하루하루 지내기가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불안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월드컵」이라는 국가 대행사가 망쳐질까, 온 국민이 걱정하며 방역에 임하고 있을 때, 한가롭게 진흥회는 낙농가와 기능이 다른 권역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회원단체간 반목과 낙농인의 불신의 벽만 쌓았을 뿐만 아니라 진흥회의 구체적 책임을 생각해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말았습니다. 진흥회 기자회견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원유수급안정대책 이행의 동참 호소입니까? 아니면, 원유수급불균형의 책임 없음의 주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회원단체와 낙농가를 한꺼번에 혼내주려는 것입니까?

원유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장으로서, 가사 낙농가의 근거 없는 비판과 책임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오히려 회장으로서는 현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진흥회는 생산자, 생산자 권의 단체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낙농진흥법 제5조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가격안정의 추진을 위하여 진흥회를 설립한다」하였고, 제6조 진흥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
3.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 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법 제8조에 원유등의 수급계획을 위해 젖소 사육전망, 원유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등을 포함하여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책임도 함께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흥회의 주장대로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이며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진흥회 집행부는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할 것이며, 고임금의 간부요원의 필요성을 재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이한 자세와 늦장대처 부분은 없는 것인가?」입니다.

진흥회의 주장대로 (우리의 입장과 소신 7쪽 4항) 2001년도 12월 중반부터 원유 잉여량이 예상외로 증가되어 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폐기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2002년 3월 15일 낙농육우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농림부 관계자는 「학교 분방학이 끝나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한 점과 2001년도 12월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정부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진흥회가 4월 25일과 4월 29일 낙농가에게 뒤늦게 현 상황을 고지하는 등,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농림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흥회의 안이한 자세와 늦장이란 추궁을 면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집유일원화 제도 정착의 미진함」은 일부 유업체들이 양다리 걸치기 수법으로 몸통은 빠져나간채 일부분만을 가입시켜 진흥회 사업에 참여하는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진흥회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사실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수법은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이용하고 제도권 안에서 낙농정책 등에 참여하는 행태를 허용하는 한 집유일원화 제도정착은 요원 할 것으로 보이며 의사결정에서 항상 낙농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2. 도태보상금과 관련하여

진흥회 회견지 9쪽 5항에 「우리회를(진흥회)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소속

집유조합과 각 유업체의 자율도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정부의 도태 보상금을 기대하며 도태를 지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태보상은 폐유가 아닌 정상 착유우로써 도태될 때 경제적 손실이 크며, 일시적 도태는 흉수출하의 현상을 빚고 따라서 시장가격은 턱없이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착유우로 성장할 때까지의 투자는 300만원이 넘는데도 도태시 육우로써 가격은 평균 50만원이 안되므로(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마치 진흥회가 원유를 처리함에 있어 유업체에게 차액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평소 정상우가 질병으로 제 기능을 잃을 때 손실 차액을 전액 보조해 주어 축산농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자국의 낙농인은 특수한 경우에 손실 차액의 극히 일부를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해는커녕, 진흥회는 마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농민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논, 밭도 직불제를 시행하여, 차액보존을 해 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태 보상금을 노리고 도태를 지연했다면 발표 이후 도태물량이 쏟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태보상을 바라고 사전 도태를 지연했다는 진흥회 주장은 낙농인 전체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도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시골벽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진흥회의 주장은 단체로써 해서 안 되는 치사스런 가벼운 언어사용 아닌가 싶습니다.

3. 원유수급조절의 불균형은 낙농가의 「자제심 상실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진흥회는 15쪽 「작금의 수급 불안정은 「비탄력적인 원유가격과 전량 납유보장」에 따른 낙농가의 자제심 상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전업, 전문화를 유도하였고, 낙농인은 전문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설비 부담이 모두 부채로 남았으며, '98년 IMF이후 파산의 위기를 겨우 넘겼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진흥회가 집유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낙농인에게 안심하고 가입하도록 낙농인에게 유익한 말만 골라했음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낙농가의 자제심 상실이 원인」이란 옳지 못한 주장입니다. 2001년 11월 30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송인근 상무는 「원유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는 낙농가의 질문에 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4. 원유가 인하 주장에 관하여

「우리나라 원유가격은 계속해 오르기만 하였지 한번도 낮아진 적이 없고 동일가격을 보장받고 전량 판매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가격을 내릴 조짐만 보이면 집단행동 등으로 세력을 과시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낙농인의 원유수취 가격은 대략 4~5년 간격으로 물가 상승폭에 따라, '98년 IMF시기를 제외하고 소폭 인상되었고, 인상폭은 일반음료수의 상승가격에 미치지 못했음은 과거 기록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원유가격 인하의 구실이 원유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낙농소득의 변화 추이를 예로 들어 낙농소득이 계속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농소득은 법이 정한 위생등급의 차등 적용규정에 의거 낙농가가 매년 위생등급의 고급화에 주력한 결과이지 원유가의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원유질의 고급화는 낙농가의 희생이 동반되어 전부가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 예로 체세포 불량 소의 조기도태, 조기건유치료, 불량원유의 폐기, 유질 개선 목적의 보조사료투여 등 희생과 투자가 동반되므로 전액 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우유제품 가격의 적정성을 통상 1주간 교통요금과 비슷한 수준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주간 교통요금 600원, 우유1통 350원으로 우유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린 생명을 성장케 하는 필수적 영양을 갖춘 우유가격이 물 값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원유값 인하는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홍보방법의 필요성을 지적한 소비자 대표의 주장이 그렇고, 매년 10%이상 부채상승의 고질적 농촌경제를 회생할 수 없도록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은 본능이며, 권리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진흥회의 「집단행동의 다반사」란 표현은 지나치며, 당신들이 피해 당사자라면 더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98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발표에 의거 16.5%상승했으나, 체감상승률은 25%가 넘으며, 각종 조사료는 50~80%상승했습니다.

농림부의 우유생산비를 비유하고 있으나 생산비는 표준조사 대상자를 선정만 했을 뿐 생산비를 정부의 물가안정의 기틀 속에서 짜여진 것이므로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 반증으로 우유생산비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7년 이후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결하 되었음을 온 국민이 알고있는 터에 '97년 생산비는 507원, 2001년 446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산비라 할 수 있습니다.

원유가격을 논할 때는 농가 부채라는 국가의 가장 큰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적 감정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원유가격 인하로 얻는 이익을 유업체의 우유홍보에 사용되게 할 수 있다는 5월 15일 조합장 회의에서 발언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원유수급 안정대책 추진 재촉구(02. 5. 14, 5. 22)에서 「01년 생산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도태와 가격인하는 별도로 병행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정부 방침은 진흥회의 기사 회견문 중에 원유가에 대한 거론과 발언 등으로 보아 진흥회의 강력한 건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진흥회는 낙농가에게 혼란을 주는 원유가격 인하에 대한 발언을 중지하고,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농가의 의견수렴과 설득, 노력등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필자연락처 : 031-535-8198)

(이 글은 낙농육우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